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과 우리의 경제 안보에 미치는 함의

한 동 만

연세대학교 초빙교수 / 前 주필리핀 대사

[기획자 註]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그린란드 병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주요 국가들간 경쟁이 한국 경제 안보에 미칠 함의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획: 박동준 연구실장(djpark@jpi.or.kr)].

* 이 글에 포함된 의견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요약

미국이 최근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 그린란드를 위요한 미국과 나토(NATO) 회원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린란드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 니켈·리튬·티타늄 등의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 등이 모두 풍부하다. 또한 북미와 유럽의 가운데에 자리해 공군과 미사일 전력 운용 측면에서의 가치도 높다. 군사전략적 중요성과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북극항로의 중심지에 위치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지배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립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란드는 한국의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미래 물류 혁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의 틀 내에서 협력하며, 그린란드의 자원과 한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결합한 '원-원' 모델을 제안하여, 단순한 채굴권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북극권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전략과 글로벌 위상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한국은 나토 파트너국으로서 북극 안보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북극 항로 이용 선박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극지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셋째,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대사)는 그린란드 주변 해역의 안정적 통항을 위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조해야 하며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북극 이사회의 의장국인 덴마크와 '녹색성장 동맹(Green Growth Alliance)'을 넘어 북극 안보 및 항로 운영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년 1월 17일,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여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이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purchase)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부과된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원하고 있고, 덴마크는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보이고 있으므로 미국이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거듭 펼쳤다.¹⁾

그러면서 미국은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과 "즉각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향후 그린란드 문제에 대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유럽 각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웨덴 등 각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응 의지를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들이 집단 안보를 추구한다는 이유로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건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 최대 930억 유로(약 159조 197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월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유럽의 반발이 거세지자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1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담 후 2월부터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간 대서양 동맹과 NATO의 균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합병 의지를 강조하면서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와 지정학적 중요성에 관한 관심도 뜨겁다. 그린란드는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의 희토류, 니켈·리튬·티타늄 등의 전략 광물, 천연가스와 원유 등이 모두 풍부하다. 또 북미와 유럽의 가운데에 자리해 공군과 미사일 전력 운용 측면에서의 가치도 높다. 자원과 안보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견제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요충지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1) 2026년 1월 13일 자, Voice of America.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의 주요 거점이자 북미 방어의 전략적 요충지로, 빙하 해빙으로 인한 새로운 항로 개척 가능성과 풍부한 희토류 및 광물 자원 때문에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기후 변화로 북극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군사적·경제적 가치가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2. 그린란드를 위요한 미-중-러시아의 대립

결국, 그린란드 문제는 1)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과 대립, 2) 북극 항로를 둘러싼 러시아와의 대립, 3) 희토류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극에서의 러시아와의 경쟁 그리고 중국의 본격적 북극 진출, 북극에서의 중러의 전략적 협력 등 북극의 군사 안보적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해 북극에서의 영향력을 강화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그린란드의 희토류 등 자원과 북극 항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그린란드에 발을 들이는 것을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북극 지역에서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구도를 반영한다.

중국은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Near-Arctic State)'로 규정하며, 2018년 발표한 '빙상 실�크로드(Polar Silk Road)' 구상을 통해 북극권에서의 경제적·전략적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그린란드 경제에 더 깊이 관여하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중국교통건설공사(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는 그린란드 내 두 개 공항을 개발하려 했으나, 이 계획은 미국과 덴마크의 압력으로 2019년에 취소되었다. 미국 국방부는 2019년 보고서에서 중국이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 일대에서 군사와 민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 기회를 꾸준히 모색하고 있다고 적시한 바 있다.

중국은 시베리아 내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지원하는 등 러시아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북극에서 운용할 쇄빙선도 건조 및 배치하여 현재 중국은 3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4의 쇄빙선을 건조 중이며 최근 알래스카 인근에서의 작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립된 러시아와 손잡고 북극 에너지 개발(Yamal LNG 등) 및 항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둘째, 그린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하여 북미와 유럽을 잇는 중간 기지 역할을 하며, 북미 대륙 방어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그린란드가 북극해와 북대서양 사이에 위치하여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이며, 북극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목적으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미국은 그린란드 북부에 있는 피투피크 우주기지(Pituffik Space Base)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과 우주 감시 활동에 핵심적인 거점이다.²⁾

또한, 그린란드는 장차 유럽 및 북미 동부 해안과 아시아를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연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북극 항로 한가운데 있다. 현재 해상 루트보다 약 40% 정도 운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2035년 또는 2040년경에는 여름철 북극 해빙으로 인해 이러한 초월 북극 항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는 북극 항로를 둘러싼 미국, 러시아, 중국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³⁾

셋째, 그린란드에는 많은 양의 희토류 등 자원이 매장되어 있어, 미국은 이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희토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 목표와 연결되며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경제적, 장기적 포석을 하고 있다. 그린란드 지질 조사국 등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그린란드는 희토류(3,610만 톤), 니켈(190만 톤), 리튬(23만 5000 톤), 티타늄(1,210만 톤) 등 다양한 광물을 보유했다. 특히 희토류는 반도체, 배터리, 방위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필수적인 원자재로 중국과 패권을 다투는 미국에 꼭 필요하다. 중국은 현재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장악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하겠단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린란드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 경제 안보에 미치는 함의

그린란드는 한국의 경제 안보, 에너지 공급망, 그리고 미래 물류 혁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

첫째,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등 경제적인 영향이다. 그린란드는 21세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희토류와 전략 광물의 보물창고이다. 한국의 배터리·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리튬, 흑연 등이 막대하게 매장되어 있다. 현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을 다변화하여 공급망 안정을 통한 경제 안보를 강화할 기회이다. 또한, 자원 외교 측면에서 중요하다.⁴⁾ 한국은 과거부터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으며, 최근 미·중 자원 경쟁 속에서 ‘한·미·일 광물 안보 파트너십’ 등을 통해 그린란드 자원 확보를 위한 협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그린란드 내 환경 규제(우라늄 채굴 금지 등) 및 원주민 권익 보호 정책, 그리고 미국의 매입 시도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그린란드는 환경 보호를 국가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고 있어, 규제가 매우 엄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2021년 우라늄 채굴 금지법 (Uranium Act)을 제정하여 우라늄 함량이 100ppm 이상인 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란드 정부의 광물 자원 전략 2025-2029(Greenland Mineral Resources Strategy 2025-2029)에 따르면, 모든 개발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과 원주민(이누이트)의 생활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2) 2026년 1월 13일 자 펜N 마이크(유가연 기자, ‘미국이 그린란드를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이유’)

3) 2026년 1월 9일 자, 글로벌 이코노믹(신민철 기자,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재점화...북극항로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

4) 2025년 1월 27일 자, 문화일보(박준희 기자, ‘트럼프가 노리는 그린란드...한국도? “경제안보 중심지 부상”)

(EIA)와 사회적 영향평가(SIA) 통과가 매우 까다로운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1년 이후 환경 보호를 이유로 신규 육상 석유/가스 탐사 허가가 중단되었으며, 광물 탐사 역시 기존 라이선스 연장은 허용되나 신규 허가 시에는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그린란드를 '고위험-고수익(High Risk, High Reward)' 시장으로 보고, 정부의 외교적 지원 아래에 미국·캐나다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진출 기회를 엿보고 있는 단계이다. 한국은 2024년 7월부터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소속 국가로서 미국, 덴마크 등과 함께 그린란드를 포함한 글로벌 광물 공급망 강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광물 협력 대화'를 정례화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독점적 영향력을 견제하고 한국 기업의 탐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적 포석이다. 한국 지질자원연구원(KIGAM)과 국내 주요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공동으로 그린란드 현지 광구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기술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희토류(네오디뮴 등)와 리튬 매장 지역에 관한 정밀 탐사 데이터를 공유하며 기업의 직접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은 그린란드 남부 광산 개발을 주도하는 아마록(Amaroq) 등 현지 유망 기업과의 지분 투자 및 장기 공급 계약(Offtake)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독 투자'보다는 미국·EU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이 유리하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투자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 수출입은행(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EXIM) 등의 정책 금융과 연계한 한·미 공동 진출이 리스크를 줄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의 틀 내에서 미국, 그린란드 당국과 직접 소통하며, 그린란드의 자원과 한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결합한 '윈-윈(win-win)' 모델을 제안하여, 단순한 채굴권을 넘어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 등 안보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중 및 미·러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북극권의 중심에 그린란드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은 나토(NATO) 등 서방 동맹 내 균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에 미국 중심의 가치 사슬 참여와 유럽과의 관계 유지 사이에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는 안보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우주군 기지(피투피크, 舊 툴레 공군 기지)가 위치한 그린란드는 북반구 미사일 방어의 핵심으로, 북극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는 한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극권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의 생존 전략과 글로벌 위상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북극을 러시아·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최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책임 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미국의 북극 전략(Arctic Strategy)에 보조를 맞추며 한미 동맹을 북극권까지 확장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북유럽 국가들의 나토 가입으로 북극이 '나토 vs 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됨에 따라, 한국은 나토 파트너국으로서 북극 안보 모니터링에 참여할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갖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북극 항로 이용 선박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강화하고, 극지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한국군은 북극권의 지정학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해군과 공군을 중심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6년 말 준공 예정인 아라온 2호는 기존보다 향상된 쇄빙 능력(1.5m 얼음 돌파)을 갖추게 된다. 해군은 이를 활용한 극지 해상 보급 및 구조 훈련 데이터 확보를 추진 중이다. '해군 비전 2045'에 따라 북극 항로 보호를 위한 기동함대의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⁵⁾ 극해의 저온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무기 체계의 내한 성능 테스트를 강화하고 있다. 북극권은 위성 통신이 불안정한 지역으로 한국군은 초소형 위성 체계를 통해 북극권 내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극지용 통신 장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북극권의 군사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 군집 등 독자적인 정보 수집 자산 확보가 시급하다.

2013년 우리는 북극 이사회 옵서버 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이후 북극 이사회 내에서 활발한 '과학 외교'를 펼치고 있다.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한국의 북극 정책을 총괄하는 수석 대표로, 특히 북유럽 안보 협력에서 핵심적인 '연결고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포함), 핀란드 등 북유럽 5개국(Nordic 5)과 안보 대화를 주도하고 특히 나토(NATO)에 새로 가입한 핀란드·스웨덴과의 안보 협력을 통해 북극 내 러시아 견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2025년 5월 노르웨이로부터 의장국 지위를 물려받은 덴마크(그린란드, 페로제도 포함)가 2027년까지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를 이끌게 된다. 이번 의장국 기간에는 그린란드가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며, 북극 원주민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핵심 의제로 삼고 있다.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2025.10.16.(목)~18.(토)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개최된 2025 북극서클총회(Arctic Circle Assembly)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는 북극권 주요국 정·관계 인사를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 기후·환경 문제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대표는 북극 과학연구 활동 및 북극권 국가와의 양·다자 협력 등 그간 우리나라의 성과와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북극 기후·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⁶⁾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2026년 9월 예정된 북극 항로 시범 운항과 연계하여, 이사회 내에서 안전한 항행 및 환경 규범 제정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극지협력대표는 이사회 회의에서 '과학 외교'를 넘어 '규범 기반의 질서'를 강조하며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특히, 그린란드 주변 해역의 안정적 통항을 위해 UN 해양법 협약(UNCLOS)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지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일방적인 항로 선점에 대응하는 서방 국가들의 연대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⁷⁾

5) 2019년 2월 8일 자 서울경제(권홍우 논설위원, “해군, 오토츠크·베링해까지 누벼..’韓·中·日 북극해 삼국지’ 예고”)

6) 2025년 10월 9일 자 외교부 보도자료(정병하 극지협력대표, 2025 북극서클총회 참석)

7) 심성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정책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 2025. 2. 28. | 제2326호, pp.3-4.

셋째, 물류 혁신과 조선업 기회를 제공하는 북극 항로의 영향이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항로가 활성화됨에 따라 그린란드는 새로운 해상 경로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항에서 유럽(로테르담)까지의 항로가 기존 수에즈 운하 대비 약 7,000km(30%) 단축되며, 운항 시간은 약 10일 정도 감소하여 물류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북극 항로 활성화에 대비해 부산항을 북극 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을 추진 중이므로 부산항의 허브화를 이룰 수 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북극 항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며, 이는 국내 조선업계에 강력한 수주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극 항로 운항에는 일반 선박이 아닌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Arc7급 쇄빙 LNG선 등 극지용 선박이 필수적이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예산 안에 쇄빙 기능을 갖춘 선박 건조 지원금을 적당 약 11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국내 선사의 발주를 독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쇄빙·내빙 선박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조선사(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는 세계 최고의 쇄빙 LNG선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고부가가치 선박을 독점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은 2026년 수주 목표를 전년 대비 29% 상향한 233억 달러로 설정하며 북극권 물류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하고 있다. 2026년 9월경 부산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의 북극 항로 시범 운항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상업용 북극 선박 발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후 외교를 통한 영향력 확대도 필요하다. 군사적·경제적 접근이 예민할 수 있는 지역 특성상, '과학 연구'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적 도구이다. 우리 정부의 극지연구소는 그린란드 빙하 연구 및 기후 변화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 인프라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북극권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린란드의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경제 발전을 도울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수소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양자, 다자적 협력을 통한 실용외교 추진 필요

에너지 및 공급망 안보 등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 차원에서 보면 북극 항로가 분쟁 지역이 될 경우, 수에즈 운하의 대안으로서 기대했던 '물류 혁명'이 오히려 '안보 리스크'로 변질될 수 있다. 러시아가 북극 자원을 무기화하거나 중국이 그린란드 광물권을 선점할 경우, 한국의 핵심 산업(반도체, 배터리)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을 통한 다국적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린란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단순히 북유럽 국가와의 우호를 넘어, '공급망 안보'와 '북극 항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린란드의 외교권은 덴마크에 있지만, 자원과 경제 정책은 자치정부의 권한이 크다. 외교부는 극지협력대표를 통해 앞으로도 북극의 평화적 이용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북극권 및 유관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정례적인 협력 채널을 가동하고 북극 이사회의 의장국인 덴마크와 '녹색성장 동맹(Green Growth Alliance)'을 넘어 북극 안보 및 항로 운영에 관한 긴밀한 공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그린란드 외교는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기반으로 하되,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실질적 경제 협력”을 끌어내고 “덴마크 등 북극권 국가와 협력”을 통해 북극 항로의 안정화와 히토류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는 실용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자소개: 한동만

한동만 대사는 연세대학교와 프랑스 팡테옹 소르본느(파리1) 대학원에서 공부(국제행정)하였으며, 파리 정치대학(Science Po) 유럽통합과정과 서울대 세계경제 최고전략과정을 수료하였다. 1985년 외교부에 입부(제19회 외무고시)한 이래 알제리, 영국, 호주, 미국(뉴욕, 워싱턴)에서 근무하였고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행정관, 국제경제국장으로 근무한 후,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역임하였으며 외교부 재외동포영사 대사를 마치고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 필리핀 대사로 근무하였다.

국립외교원 아세안-인도연구센터 고문(2021.4-2023.4)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 가톨릭대, 성신여대, 필리핀 아테네오 데 마닐라 대학 초빙교수,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 방문학자, 한국 외교협회 부회장 겸 학술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의 10년 후를 말한다-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와 우리의 미래전략』(2011), 『혁신의 실리콘밸리,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다』(2015), 『대한민국의 신 미래전략, 아세안이 답이다』(2019), 『영사외교의 이론과 실제』(2024, 공저), 『국제 질서의 변곡점에 선 한국외교의 고뇌』(2024, 공저)가 있다.

2026년 1월

저작권자 © 제주평화연구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